

득장재판 14년 “법원이 너무해” ▶6

시멘트값 인상 예고 지역건설업체 한숨 ▶8

LA다저스, 커쇼 7년 2289억원 계약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659호 1판 2014년 1월 17일 금요일 (음력 12월 17일)



원양 가족의 힘찬 날갯짓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양 무리가 16일 담양군 대덕면 한 저수지를 찾아 거울을 낳고 있다. 암수가 늘 함께 다녀 ‘의좋은 부부’로 알려진 원양의 수컷은 몸 빛깔이 다양해 아름답지만, 암컷은 갈색을 띠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혈세 먹는 공룡 맥쿼리, 광주 떠나라”

‘제2순환도로’ 항소심 판결후 드러난 기형적 수익구조에 시민들 분노 퇴출 운동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 투자회사인 맥쿼리가 고묘한 수법으로 거액의 ‘시민 혈세’를 쟁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맥쿼리 자본의 광주 퇴출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영터리 계약에 따른 통행료 보전금으로 매년 200억원대의 시민세금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회사 자체 구조를 바꿔 수천억원의 이자를 쟁기는가 하면 하이패스 등 시설투자는 회피하고 세금은 한푼도 안내는 등 전형적인 ‘투기 자본’의 행태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근 맥쿼리측의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하면서 왜곡된

민간자본의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외국계 자본(23.28%)과 한화생명보험(10.71%), 뉴튼인베스트먼트(7.12%), 교보생명보험(6.08%), 공무원연금관리공단(5.30%) 등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맥쿼리측이 주주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어려운 광주시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쿼리는 실제 지난 2000년 자기자본 543억원으로 제2순환도로의 운영권을 따낸 뒤 10여년동안 광주시로부터 재정 보전금으로만 1393억원을 받아 쟁겼다. 이는 자기자본금의 3배에 가까운 액수다. 분명 거액을 벌어들였지만, 맥쿼리가 출자한 제2순환도로 운영사는 오히려 2000억원이 넘는 부

맥쿼리 기형적 수익구조
영터리 계약으로 매년 보전금 200억
자본구조 바꿔 이자 수천억원 쟁겨
적자 이유 세금 안내고 하이패스 등 설치 외연

채를 안고 있다. 맥쿼리가 본인의 오른쪽 주머니의 돈을 꺼내 왼쪽 주머니로 쟁겨넣는 수법을 썼기 때문이다.

맥쿼리는 실제 제2순환도로의 재

산인 자기자본금을 일부러 없애 뒤판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같은 회사

에서 고금리로 거액을 다시 빌렸고 이 과정에서 이자로만 1401억원을 쟁겼다. 이렇게 양쪽에서 쟁긴 수익금 대부분은 주주에게 배당됐다.

맥쿼리는 또 적자 등을 이유로 전국 대부분의 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 등 편의시설 확충은 외연해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객이 줄더라도, 시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고객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맥쿼리의 뻔뻔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광주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퇴출 운동까지 벌일 조짐이다.

(사)시민생활환경회의는 “사회간접

자본(SOC)의 공공성 및 책임을 망각하고 오로지 기업의 수익극대화에만 혈안이 된 투기자본의 주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광주를 떠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도 성명을 통해 “(이번 승소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시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만큼 광주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인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대표하는 광주는 역사적으로 권리집단의 횡포만을 참지 못하고 대량해운 지역”이라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맥쿼리의 광주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역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맥쿼리 퇴출 시민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7·30 재보선 ‘미니 총선’ 되나

대법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시·도지사 출마자 겹쳐 최대 10~15곳 전망

6·4 지방선거 직후 치러질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가 두자릿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 3명이 무더기로 금배지를 잃었다. 비례대표인 현 의원을 제외하고, 일단 수도권인 2곳이 재·보궐선거 대상지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전체적인 재·보선 규모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최대 10~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 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지역만도 5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나주·화순을 포함, 인천 서구·강화를, 인천 계양을, 충남 서산·태안, 서울 서대문을 등이 그곳이다. 대법원 재판 결과가 당선무효형을 유지한 상태로 6월말까지 나온다면 재·보궐선거는 모두 7곳에서 치러지게 되는 셈이다.

또 2심에서 아슬아슬하게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거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과기환송된 지역구도 최종 판결에 따라 재·보선 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구 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6·4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는 현역의원들이 여야에서 여려 명 거론되고 있어 재·보선



지역구는 10군데를 훨씬 넘길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후보등록에 앞서 반드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광주·전남지역만 해도 현역 의원 3~5명이 광역단체장 선거 도전을 준비 중이거나 고민 중이다. 또 경기지사와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는 유력 주자들은 대부분 지역구 현역의원들이다.

만약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다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한 둘째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이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원 3명은 유죄에 따른 당선무효가, 2명은 무죄가 확정돼 회비가 엇갈렸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시-안행부 전공노 가입 투표 갈등

광주시가 시 공무원노동조합(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 투표를 허용하면서 정부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6일 오전 간부 회의에서 “시장이 업무 시간 외 전공노 가입 투표 허용을 지시했는 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내가

책임질 테니 (투표 방해 등)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전공노가 불법단체인 만큼 가입을 위한 투표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힌 오부시장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부시장은 이날 오전

강시장 “내가 책임” 사실상 허용 안행부 “불법행위…집행부 징계”

입을 위한 모든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별 및 형사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조합원들이 투표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는 온라인상에서도 투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재적조합원(1290명) 과반이 투표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공노에 가입할 계획이다. 투표에는 16일 오후 6시 현재 3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의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11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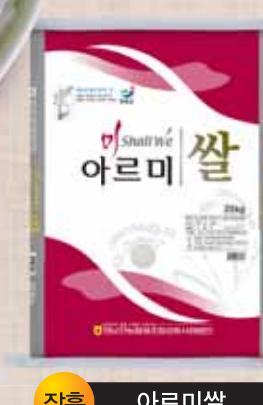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전남쌀」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결과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 중 6개 선정

●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친환경 전남쌀」
7년 연속 선정



녹색의 땅 전남
Green Jeonnam